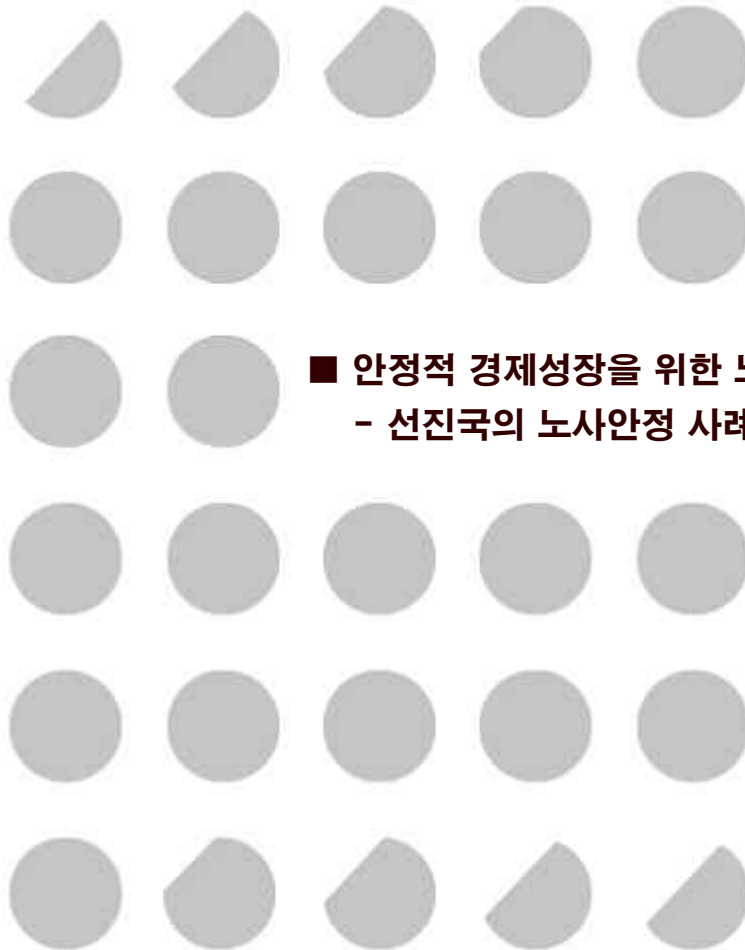




08-24 (통권 302호)

2008.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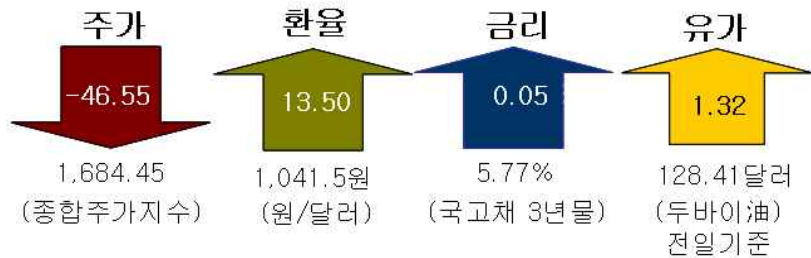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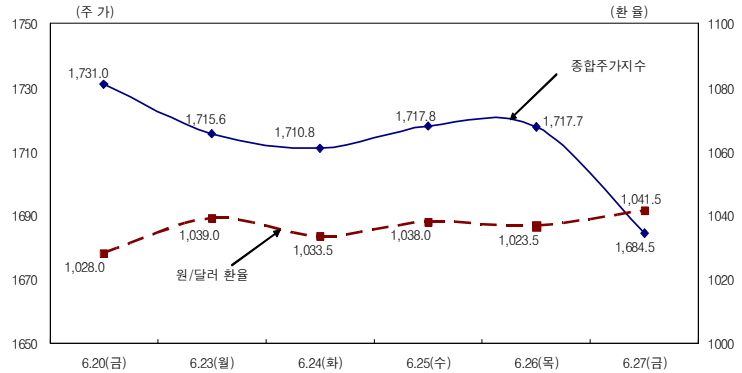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 선진국의 노사안정 사례와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20~6.2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 선진국의 노사안정 사례와 시사점	1
주간 경제 동향	18
□ 실물 부문 :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확대	18
□ 금융 부문 :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영 전략실 : 이 철 선 연구 위 원 (3669-4128, cs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 선진국의 노사안정 사례와 시사점 -

1. 갈수록 악화되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 2002년 배럴당 20달러였던 두바이산 원유가 6배 상승한 가격인 12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연말까지 2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 속에 화물연대의 파업과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의 총파업 예정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액은 20억 6400만 달러로 GDP의 0.23%이며, 생산차질액은 3조 324억 원이었다. 그리고 '98~'99년 42~46%에 이르렀던 불법분규 비중은 '06년에 17.4%로, 직장폐쇄 건수도 '06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여 한국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초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당분규 지속일은 '04년 24.7일에서 '06년 54.5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500인 이상 기업의 분규비중도 '01~'05년 20%대에서 '06년에 다시 40%대로 증가하는 등 노사분규의 특징이 전국 파업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경제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06년도 분규로 인한 생산 및 수출차질액의 98.5%와 98.8%가 9개 대기업장에서, 그리고 94.7%와 98.3%가 4개 자동차 회사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한국의 노사분규수는 일본에 비해 3.3~8배 ('05~'06년), 미국에 비해서는 6~36배('05~'06년)나 많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 6년간 한국의 노사관계 생산성이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라고 평가하였다.

(문제점)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노사관과 협의방식, 그리고 노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노사관은 협력적 관계보다는 계급투쟁적·대립적 노사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인한 노조억제 정책실시 이후, 블루칼라 중심의 노조와 재계의 계급갈등적 성격이 강했다. 비록,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일시적으로 형성했었지만, IMF시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 대립관계가 강해진 상황이다.

둘째로 협의방식에서 노사간 협상을 위한 소통기회 및 창구가 부족하다. 비록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대국민 합의를 위한 협의단체이고, 각 기업별로 정보교류를 위한 노사협의체는 부족하다. 특히, 한국이 각국별 쟁의로 인한 손실일수에서 선진국보다 크다는 사실은 노사가 쟁의발생 이전에 상호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시도가 적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노조들이 임금협상 등 기업 현안보다는 사회 및 정치이슈 중심에 집중하고, 일부 귀족노조들은 집단이기주의로 노노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임금협상보다는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법, 한미 FTA 등이 과거의 주요 이슈였고, 올해의 경우에도 기업현안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산별교섭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몇 년 전부터 비행기 조정사 등 일부 노조들은 운행시간 등 '안전 확보'를 내세운 파업을 통해 영어시험 면제, 운항 전 음주측정 금지 등의 과다 요구로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받았다.

넷째, 사용자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손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노조와 근시안적인 협상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기업들은 기업위기 시, 경영정보를 솔직하게 노조와 공유함으로써 고통분담을 공유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 및 기업 손실을 우려해 민 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노조의 요구를 일관성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노사간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개입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08년 1월 전경련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정부는 노사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0.2%로 나타났다. 정책측면에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의 시행을 연기하는 등 적극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2007년 한미 FTA 파업, 이랜드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 선진국의 경제위기시,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자발적 협조체계 구축형) 우선, 일본은 엔고불황 시기, 전국노조의 자발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노사단결로 노사안정을 이루어 낸 경우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고불황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은 경제폭탄시대를 맞았고, 정부는 민간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와 임금억제, 최저 임금 적용 범위 축소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노조는 실업률 상승과 경제위기 공감으로 감량경영, 노조파업 자제 등 노사협조운동을 전개하였고, 사용자측은 경제단체 중심으로 노사협의체를 보급하였다. **일본이 노사단결로 노사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성공요인에는 노조생성기에 생성된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도, 기업별 노동조합 등 노사문화와 우익계 노조의 강화, 상부 노동단체로부터의 노사협조운동, 노사협의체 보급이 있다.**

(영국: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형) 영국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으로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 경우이다. 1976년 IMF 구제금융, 高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연실업률 10%대 등 소위 '영국병'을 앓고 있었지만, 새로이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정부는 영국병 퇴치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강력한 노조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탄광노조가 불법파업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였으나, 노노갈등과 파업실패, 노조위원장의 수뢰혐의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노조세력은 약화되었다. 물론 단일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세대 협약을 외국기업이 도입하고 사용자측의 인적자원관리의 도입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대처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노조억제 법률, 불법파업에 대한 경제적 손실 부과 법안이 노사안정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사용자 중심 법치주의형)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유도한 경우이다. 1980년 2차오일 쇼크로 경제위기를 맞은 미국은 레이건 노믹스를 통한 경제회생 정책을 실시하던 중 미국관제사 노조의 불법파업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부는 1만 2,000명을 해고하는 초강수의 법치주의로 불법파업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하락 이유로 노조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여론에 의해 지적되면서 노조는 단체협상 시, 임금근로조건의 양보 대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양보교섭을 수용하는 등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은 노조존속 공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노조세력이 약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인적자원관리의 적극 도입을 통해 노조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강력한 법치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노사관계에 **미국정부의 개입이 낮고, 주주이익중심의 기업경영 토대 위에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자율적 해고와 종업원 복지 無임무 등 사용자 중심의 노사관계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독일: 노사정 협의체형) 독일은 노사정 중심의 협의와 고통분담으로 노사관계가 안정화된 경우이다. 90년대 후반부터 통일후유증 등으로 실업률이 6.4%~12%에 달했던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평가를 받았다. 이에 독일정부는 'Agenda 2010'이라는 사회복지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발표하고, 해고금지제 적용 완화, 고용보장억제 정책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민당내 친노조 세력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찬성하였다. 한편 사용자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초기 인원감축과 공장 폐쇄 등을 실시하였지만, 노조의 유연근무제 제안에 공장이전 계획을 철회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였다. **독일의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이유는 노조활동을 사회혁명보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혁과 임금투쟁에 한정한다는 경제적 조합주의가 1910년대부터 형성되었고, 경영조직법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권을 가진 산별노조가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사회정책 협의에 적극적이며, 개별기업에서는 기업정책 결정에 참여 가능한 종업원협의회가 있기 때문이다.**

□ 한국형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과제

(기본 방향: 법치주의와 고통분담에 기초한 노사 자율협력체제 구축) 향후 한국이 구축해야 할 新노사관계모델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모델들은 각각의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영국모델은, 박정희 정부시대부터 실시된 노조억제 정책으로 형성된 지금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모델은 종업원들이 다국적·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은 낮다. 독일모델도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유럽식이 아닌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한 주주들의 수용이 어렵다. 반면에 일본은 연공서열제, 기업별 노동조합 등 노사관계 특징과 '준투' 등 쟁의문화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벤치마킹 모델로써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좌우익 노동계의 이분화 및 우익계 강화와 같은 노동계 내부 현상이 한국에도 반드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법치주의, 독일의 고통분담과 같은 장점들을 결합한 한국형 노사관계 안정 모델이 한국에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고통분담에 기초한 노사관계 자율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불법·정치파업 근절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국민 대상의 홍보에 집중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무관용 원칙 고수와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로는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분리보다는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너지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노동정책이 구현되지만, 한국은 '성장'이라는 현재의 정책 속에 과거정부의 '분배' 정책으로 파생된 정책이 존재해 일관성이 떨어진다. 셋째는 현재 노조탈퇴로 기능이 축소된 노사정 위원회를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로 인한 한국의 노사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과제) 노조 등 노동자가 사용자와 계약관계자라는 입장에서 협력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노조에 일방적인 고통부담보다는 사용자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노사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노사협의제 활성화와 원활한 단체협상을 위한 노사간 先공유-後협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는 참여·복지제도 등 인적자원관리 도입으로 노사상생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조의 과제) 노조 또한 기업과 사회, 국가에 책임을 지는 당당한 주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자체감소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둘째, 산별노조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정치이슈와 기업이슈를 분리해서 정치이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이슈는 기업별 단체협상에서 논의하는 선진화된 협상문화 도입이 필요하다.

<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

- 최근 한국의 노사분규는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 발생되고 있음
 - 500인 이상 기업의 분규비중이 '01~'05년 20%대에서 '06년에 40%대로 증가
 - 한국의 노사분규 건수는 일본에 비해 3.3~8배('05~'06'년), 미국에 비해 6~36배('05~'06'년) 많음
 - IMD는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에서 지난 6년간 한국의 노사관계 생산성이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라고 평가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

노사관	• 협력보다는 계급간 갈등의 대립적 노사관 형성
협의방식	• 노사간 협상을 위한 소통 기회 및 창구 부족
노조	• 일부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기업 현안보다는 사회 및 정치이슈에 집중
사용자	• 단기적인 손실 집착, 근시안적인 협상태도로 일관
정부	• 노사간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개입과 법 집행의 일관성 상실

선진국의 경제위기 시,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

일본	• (자발적 협조체계 구축형) 엔고불황 시, 노조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 - 가족형 노사문화, 우익계 노조 강화, 상부단체의 노사협조 운동, 노사협의체 보급이 기반
영국	•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발휘형) '영국병'치료를 위해 정부가 노조억압정책 실시 -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노조 억제 법률개정 중심
미국	• (사용자 중심 법치주의형) 2차 오일쇼크 시, 불법파업에 대한 법치주의의 고수 - 경제적 방임주의 하에 사용자 중심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설치가 기반
독일	• (노사정 협의체형) 90년대 경제불황 시, 노사중심의 고통분담으로 안정화 -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 기업별 협의기구, 노조의 자율적 파업규제가 경쟁력

한국형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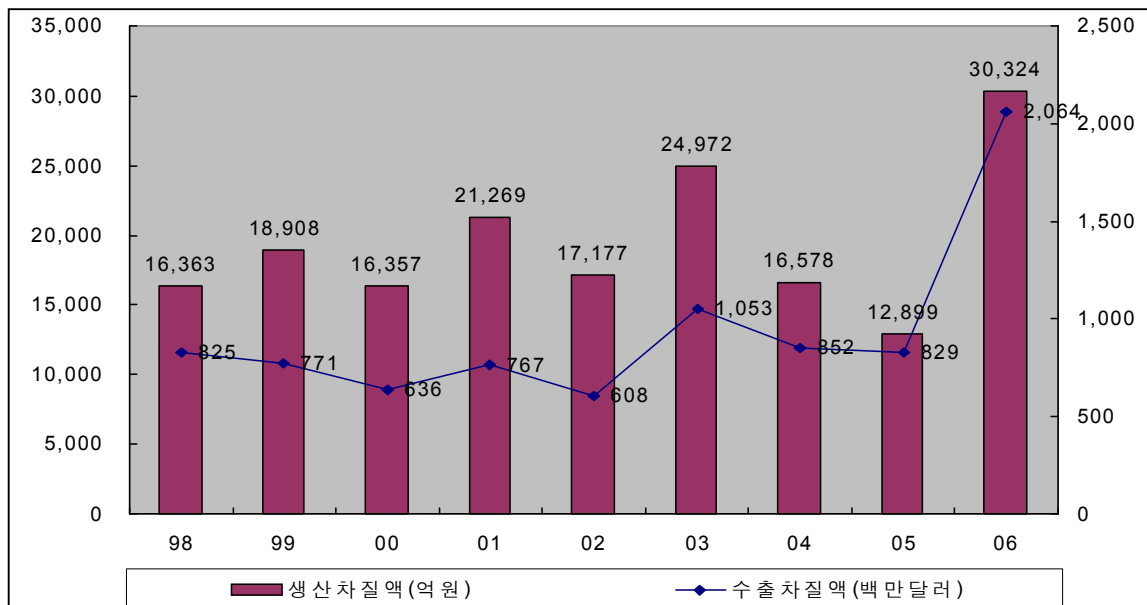
대응방향	• 법치주의와 고통분담에 기초한 노사 자율협력체제 구축
정부	• 불법·정치파업 근절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사용자	• 노조를 '계약관계자'가 아닌 '협력자'로 보는 자세와 고통분담
노조	• 기업과 사회, 국가를 책임을 지는 당연한 주체라는 인식 전환으로 파업 자제

1.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

- (노사관계 부각) 고유가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 노사문제로 인한 국가경제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2002년 배럴당 20달러였던 두바이산 원유가 6년 만에 6배 상승한 12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연말까지 2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이 와중에 화물연대의 파업과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총파업 등 한국 경제 성장에 위기감을 더하는 요소로써 노사관계가 부각되고 있음

- (경제손실) 2006년 기준,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액은 20억 6400만 달러로 GDP의 0.23%이며, 생산차질액은 3조 324억 원이었음
 - 수출차질액은 '02년 6억 800만 달러에서 점차 증가해, 2006년 20억 6,4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 생산차질액은 '05년 1조 2,899억 원으로 잠시 감소하다가 '06년에 3조 324억 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연도별 생산과 수출차질액 >



자료: 산업연구원(2007.6), '06년도 제조업 부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액 조사결과.

주: 2006년 한국의 GDP는 8,875억 달러(848조 446억 원)

- (분규 특성) 불법파업 비중 및 직장폐쇄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건당 분규 지속일은 2배 이상 증가함
 - '98~'99년 42~46%에 이르렀던 불법분규 비중이 '06년에 17.4%로 감소하고, 직장폐쇄 건수도 '06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추세임
 - 그러나 건당분규 지속일은 '04년 24.7일에서 '06년 54.5일로 2배 증가함

< 국내 노사분규 관련 지표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불법분규	건수	55	95	67	55	66	29	58	17	24
	%	42.6	48.0	26.8	23.4	20.5	9.1	12.6	5.9	17.4
직장폐쇄	건수	27	22	58	47	49	65	65	36	41
	%	20.9	11.1	23.2	20.0	15.2	20.3	14.1	12.5	29.7
건당분규 지속일		26.1	19.2	30.0	31.7	30.2	29.0	24.7	48.6	54.5

자료: 산업연구원(2007.6), '06년도 제조업 부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액 조사결과.

- (분규 발생지)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집중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90년대 40%에 육박하던 500인 이상 기업의 분규비중이 '01~'05년에 20%대 까지 감소하다가 '06년에 다시 40%대로 상승함
 - '06년도 분규로 인한 생산 및 수출차질액 중 98.5%와 98.8%가 9개 대형사업장에서, 94.7%와 98.3%가 4개 자동차 회사에서 발생함

< 국내 500인 이상 기업의 노사분규 지표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대기업 분규	건수	48	78	92	65	70	77	97	68	55
	%	37.2	39.4	36.8	27.6	21.7	24.0	21.0	23.7	39.9

자료: 산업연구원(2007.6), '06년도 제조업 부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액 조사결과.

- (해외비교) '04~'06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선진국과 비교 시, 한국은 적게는 3.3배, 많게는 36배까지 많이 발생함
 - '04년 462건이었던 분규발생건수는 '05년 287건, '06년 13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동일기간의 일본에 비해서 3~9배, 미국에 비해서는 6~36배 많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 6년간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 생산성이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라고 평가함

< 각국별 노동쟁의 건수, 참가인원 비교 >

구분	국가	'95	'00	'01	'02	'03	'04	'05	'06
노동쟁의 건수(건)	한국	88	250	235	322	320	462	287	138
	일본	209	118	90	74	47	51	50	46
	미국	31	39	29	19	14	17	22	23
	영국	235	212	194	146	133	130	116	158
	독일	361	67	48	938	-	-	-	-
노동쟁의 참가인원 (천명)	한국	50	178	89	94	137	185	118	131
	일본	38	15	12	7	4	7	4	6
	미국	192	394	99	46	129	173	100	74
	영국	174	193	180	943	151	293	93	713
	독일	183	7	61	428	40	101	17	169

자료: ILO(2007),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2006, LABORSTA 2007.

- 본고에서는 선진국들의 경제위기시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와 특성을 통해 한국형 노사관계모델 구축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 한국은 3차 오일쇼크의 우려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선진국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함
 - 불법파업, 정치파업 등 소모적인 노사분쟁보다는 기업성장을 통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이 꼭 필요한 시점임
 - 선진국의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와 성공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

-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을 노사관과 협의방식, 그리고 노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사관) 협력관계보다는 계급투쟁적·대립적 노사관이 형성되어 있음
 - 한국의 노사관계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인한 노조억제정책 이후, 블루컬러 중심의 노조와 재계간의 계급갈등적 성격이 강함
 - 비록,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형성하였지만, IMF시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노조피해가 커 대립관계가 강해진 상황임
 - 한편, 노무현 정부 때 친노동자 정당인 민노당의 국회참여로 계급갈등 문제가 제도권으로 유입되어 확대된 상황임

< 연대별 한국의 노사관계 주요 현안 >

구 분	주요 현안
일제시대	- 사회주의 계급 이념 확립 및 일본 식민통치에 대한 정치적 저항 ·1924년 조선노동총연맹 결성 30년대 혁명·정치주의·비합법주의 노동운동 전개
미군정시대	-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좌익), 46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결성(우익) ·미군정의 전평부인을 계기로 1946년, 1947년, 1948년 총파업 결행
이승만 정부	- 노사관련 입법의 윤곽과 노동행정체제 구성 및 민주적 노사관계 기틀 구축 ·1947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근로기준법 제정
박정희 정부	- 경제발전 정책에 우선한 노동운동 억제 ·1963년 노조자유설립을 신고허가로 전환, 복수노조 금지, 노조 정치활동 금지, 쟁의 행위 사전심사제, 노사협의제제 신설 등 노동관계법 개정
전두환 정부	- 노동시장 내 경쟁촉진을 위한 노동운동의 조직화 억제 ·1980년 국가 중요산업 및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억제
노태우 김영삼 정부	- 노조들의 경쟁적 임금인상 파업과 기업과의 대립 ·기업노조 중심의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 높은 파업률, 공장 폐쇄, 경찰 투입
김대중 정부	- IMF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주도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 형성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실시
노무현 정부	- 노조의 정치참여 ·친노동자 정당인 민노당의 장내 진입으로 계급갈등 문제가 제도권으로 유입 ·IMF 외환위기사,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심화

자료: 임상훈외 6명(2005), 「한국형 노사관계모델(1)」, 한국노동연구원.

- (협의방식) 노사간 협상을 위한 소통기회 및 창구가 부족함

-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국민 합의를 위한 협의단체이고, 각 기업별로 정보교류를 위한 노사협의체는 드문 상태임
- 특히, 한국이 각국별 쟁의로 인한 손실일수에서 선진국보다 큰 것은 노사가 쟁의발생전과 후에 타결을 위한 소통시도가 적었음을 의미함

< 각국별 쟁의행위 손실일수(임금근로자 천명당) 비교 >

국가	'95	'00	'01	'02	'03	'04
한국	31	144	79	111	90	81
일본	1.4	0.7	0.5	0.2	0.1	-
미국	51	161	9	5	32	8
영국	18	20	20	51	19	34
독일	8	0	1	10	5	2

자료: 자료: ILO(2007),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2006*, LABORSTA 2007.

- (노조) 임금협상 등 기업 현안보다는 사회 및 정치이슈 중심에 집중하고 있고, 일부 귀족노조들은 사측에 과도한 요구로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함

- 임금협상보다는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법, 한미 FTA 등이, 과거의 주요 분규 이슈였고, 올해의 경우, 산별교섭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함
- 비행기 조정사 등 일부노조들은 운행시간 등 '안전 확보'를 내세운 파업에서 영어시험 면제, 운항 전 음주측정 금지 등의 요구로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받음

< 2008년도 주요 노사현안 >

구분	입장	
	노동계	정부/재계
비정규직 법 확대적용	- 폐지 또는 전면개정 - 외주화 규제 방안 촉구	- 처우개선 및 차별 완화
산별교섭 법제화	- 2010년까지 5대 산별노조 구축 - 산별 교섭 의제 확대	- 다중교섭·다중파업 금지 - 복수노조 설립요건 강화
고용안정 확보	- 정년연장 - 근무교대제 전환, 심야노동 철폐	-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체계 변경
공공부문 개혁	- 공무원 노조법 개선, 보완 - 공공부문 교섭구조 제도화	- 공공부문 민영화 -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법제도 개편	- 특수 고용직 권리보장 입법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재논의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자료: 비전노동센터(2007.12), "2008년 노사관계 5대 전망, 15대 쟁점," Issue Paper, Vol 28.

- (사용자) 단기적인 손실에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협상태도 경향이 있음
 - 선진기업들은 기업위기 시, 경영정보를 솔직하게 노조와 공유함으로써 고통분담을 공유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함
 - 반면에 국내기업들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 및 기업 손실을 우려해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노조의 요구를 일관성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많음

< 선진기업들의 노사상생을 위한 고통분담 >

노조	위기상황	기업의 고통분담
폭스바겐	- 94년 생산인력 과잉으로 적자 - 대규모 구조조정 필요	- 공장의 해외이전 대신 고용보장 및 유연 근무시간제 도입(주 36시간을 28.8시간제로 전환)
도요타	- 53년 노사분규로 1,500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	- 고통분담 차원에서 창업자 및 경영진 동반퇴진으로 노사 동반자 의식 형성 - 이후 55년간 무분규 지속 및 상생관계 구축
BMW	- 00년 체코공장 설립추진 - 노조는 초과근무, 토요일 평일임금 제안	- 체코공장 설립 폐지 및 라이프치히 공장 설립
美자동차노조	- 노조의 전·현직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노조담당 - GM노조 4년간 임금 동결 합의	- 미국 내 투자 확대, 공장 폐쇄 중단, 아웃소싱 사내화, 임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 추진
지멘스	- 04 '년 노동비용 상승으로 헝가리로 공장 이전을 추진	- 노조의 임금상승 없는 근로시간연장 합의로 (주 35시간 → 40시간) 공장이전 철회

- (정부) 노사간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개입과 범집행의 일관성을 상실함
 - '08년 1월 전경련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정부는 노사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0.2%였음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시행연기와 비정규직 보호법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 없이 안정성만 강조1)
 - 2007년 한미 FTA 파업, 이랜드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적용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함

1) 전경련(2007.12),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 FKI Issue Paper.

3. 선진국의 경제위기사,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

- (분석대상) 일본과 독일은 협의적 노사관계의 대표모델로서, 미국과 영국은 대립적 노사관계의 대표모델로서 선정함
 -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정부와 노조, 사용자의 대응과 기타요인별로 분석하고, 안정화의 기반이 된 성공요인을 도출함

○ 일본

- (자발적 노사관계 구축형) 일본은 엔고불황 시기, 전국노조의 자발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노사단결로 노사안정을 이루어 낸 경우임
 - (경제위기)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고불황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폭탄시대'를 맞음
 - (정부) 민간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와 임금억제정책, 최저 임금적용 범위축소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실시함
 - (노조) 실업률 상승과 경제위기 공감으로 감량경영, 노조파업 자제 등 노사협조 노동운동을 전개함
 - (사용자)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노사협의체를 보급하면서 노사협조체제를 강화함
 - (기타요인) 도요타 등 소수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대기업 노조의 산별노조 탈퇴, 우익계 렌고(連合)결성 등이 기업노조를 강화시킴

< 일본의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 >

경제위기	정부	노조	사용자
- 1985년 이후 - 경제 폭탄시대 · 플라자회담 · 엔고로 수출경쟁력 低	- 민간기업 육성 -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추진(JR설립) - 주 40시간제 실시 - 최저임금 적용범위 축소 - 노사정위원회 가동	- 노사협조 운동전개, · 감량경영 실시 · 인원감축임금억제 · 하청단가 절하 · 제품코스트 인하 - 렌고(連合)결성(우익)	- 노사협력관계 기반확립 · 노사협의체 보급 · 근로조건·인사제도·생산관리 등 협의확대

자료: 이원우(2004), "일본의 노사관계 특질과 변천과정에 관한 소고," 전문경영인 연구, Vol.7(2).

오학수(2006), "일본 노사협의회의 새로운 전개방향 모색,"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 (성공요인) 가족형 노사문화, 우익계 노조의 강화, 상부단체로부터의 노사협조 노동운동 전개, 노사협의회 보급이 노사협조를 강화시킴
 - (가족형 노사문화) 노조생성기에 만들어진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도,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사 협력체계의 근간이 됨
 - (우익 노조의 강화) 1981년 경제 불황으로 기존의 총평 등 노동 4단체가 민간노조 선행, 좌우익 전체주의 반대 등 노동조합의 우익적 개편을 실시함
 - (노사협동 전개) 엔고불황 시, 동맹·금속노련·전민노협 등 상부단체가 감량경영, 인원감축합리화와 임금억제 등 노사협조적 노동운동을 전개함
 - (노사협의회 확대) 보급된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 및 생산관리법 등에서 경영방침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조의 협조체계를 강화시킴

< 일본의 자발적 노사관계 구축형의 성공요인 >

구분	내용
노사문화	- 최초 노조생기에 만들어진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도와 미군정하에서 보급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사간 협력기반 형성
노조의 우익 전환	- 1981년 경제위기로 기존의 총평, 동맹, 중립노련, 신산별 노동 4단체가 민간노조 선행, 노동조합주의, 좌우익 전체주의반대, 국제자유노련에의 가입 등 노조의 우익 개편 실시 - 우익계 전민노협의 결성과 좌익계와 결별 - 현 일본 렌고는 노동계의 독선적·이기적 세력에 대해 공정한 태도를 취하며, 분열공작을 자체적으로 배제한다는 기본목표를 채택
파업문화	- 온건적인 노동조합으로 인해 60~70년대 계급 투쟁적 파업문화 감소 - 불법쟁의에 대한 형·민사상 손해 배상제도 실시 - 전국상위단체 노조가 좌익운동, 집단이기주의를 배척하며 협의문화를 형성 - 단체교섭 초기에 노동조합들의 결연한 의지와 단결력을 보이는 형태로 발생
경영참여	- 노사협의회 주력 보급 · '99년 기업 중 41.7% 설치 · 노조 및 사용자 지명, 비밀선거로 구성원 선출 · 초기 근로조건, 생산관리법 등에서 경영방침 등으로 확대함

자료: 최영기 외 4인(200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이원우(2004), "일본의 노사관계 특질과 변천과정에 관한 소고," 전문경영인 연구, Vol.7(2).

오학수(2006), "일본 노사협의회회의 새로운 전개방향 모색,"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 영국

-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형)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한 대처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로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킴
 - (경제위기) 1976년 IMF 구제금융, 高복지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분 재정적자,

- 연 실업률 10%대 등 소위 '영국병'을 앓고 있었음
- (정부) 보수당의 대처정부는 영국병 퇴치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함께 강력한 노조억제정책을 실시함
- (노조) 탄광노조 파업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노노갈등과 파업실패, 노조위원장의 수뢰혐의 등으로 여론의 공격대상이 되면서 노조가 약화됨
- (사용자) 외국기업이 도입한 신형태 협약(New Style Arrangement)과 인적자원관리의 도입으로 노조억제정책에 동참함
- (기타요인) 기업별 지불능력 차이, 직무에 따른 임금격차, 지역별 경기상황과 생활비 격차로 산별노조의 임금교섭이 노동자 현실을 반영하는데 실패함

< 영국의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 >

경제위기	정부	노조	사용자
- 1976년 이후 - 영국병 · IMF 금융구제 · 고복지 및 재정적자 · 잦은 노사분규 - 실업률 10~12% - 인플레이션 10% - 경제성장률 2.4%	- 노조억제정책 실시 · 조합인정 및 활동제한 · 클로즈드 숄 불법화 · 고용보장·최저임금제 철폐 · 최소 근무연한 확대 -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	- 노노갈등과 파업실패 · 탄광노조 불법파업 · 철강노조 연대 거부 · 영국노총 지지철회 - 여론악화에 조합원 복귀	- 신형태 협약 도입 · 일본 등 외국기업이 기업별 단체협상 요구 · 강제중재·단일노조 인정 등 - 인적자원관리 도입 · 80년 2%→98년 38% · 자율팀 ²⁾ 확대 · 고충처리제도 운영

자료: 이상우장영철(2007), "영국 노사관계 변화: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Vol. 7(2).

허찬영(2005), "영국의 노사관계와 '제3의 길'," 한국기업경영학회, Vol. 12(1).

박덕제(1991), "보수당 정부하의 영국 노사관계," 노동경제논집, Vol. 14(0).

- (성공요인)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노조활동 억제 및 파업억제 법률이 주요요인임
- (노사관) 업종·지역·개인 모두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한 다원주의·자율주의 노사관과 친노조성향의 노동당으로 인해 노조의 세력이 강했음
- (법률강화) 보수당의 대처정부는 노조억제과 불법파업에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함
- (법치주의 고수) 1981년 런던 브릭스톤 폭동, 1984년 탄광노조 파업 등에 대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강력 대응으로서 노조세력을 약화시킴

2)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을 팀 구성원이 공동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 영국 리더십 발휘형의 성공요인 >

구 분	내 용
노조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인정기회 상실, 클로즈드숍 불법화 등 법 개정(1980년) - 고용보장, 최소 근무 연한(6개월→2년) 확대, 최저임금제 철폐 - 파업불참이나 타노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조합원을 재재불가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 승인 시,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부과 등
파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쟁의 시,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쟁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채택 - 쟁의참여 등으로 야기된 해고 등으로 조합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삭제 - 파업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고하는 법적 장치 설치 - 파업 중인 노동자 가구에 대한 소득보조금 감축 -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12명 이상이 폭력을 행사하면 `폭동죄`에 준해 처벌 등

자료: 이상우장영철(2007), "영국 노사관계 변화: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Vol. 7(2).
 박덕제(1991), "보수당 정부하의 영국 노사관계," 노동경제논집, Vol. 14(0).

○ 미국

- **(사용자중심 법치주의형)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를 통한 강경 대응으로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킴**
 - (경제위기) 미국은 1980년 2차오일 쇼크로 실업률 7.5%, 인플레이션 11.8%에 부(-)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위기를 맞았음
 - (정부) 레이건 노믹스를 통한 경제회생정책 실시 중, 미국관제사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초강수의 법치주의 고수로 조합원 12,000명을 해고함
 - (노조) 국가경쟁력 하락 이유로 노조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여론에 의해 지적되면서 노조는 단체협상 시 임금·근로조건의 양보 대신 조합원들의 직장에서의 고용보장을 받는 양보교섭을 진행함
 - (사용자) 노조의 약화를 위해 노조존속 공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공장을 노조세력이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인적자원관리를 적극 도입함
 - (기타요인) 철강·자동차·섬유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서비스업 증대, 트럭·항공 운수업의 탈규제 정책, 여성인력 확산으로 노조가 점차 감소함
- **(성공요인) 정부의 경제적 방임주의 하에서 사용자 중심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 설치가 노사관계 안정화의 성공요인이 됨**

- (경제적 방임주의) 미국은 노사관계에서 정부개입이 낮으며 주주이익중심의 기업경영 토대를 갖고 있어 종업원을 기업과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음
- (실리적 조합주의) 노조도 경영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듯이 경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실리적 조합주의 경향이 강해 정치보다는 노사관계 현안에 집중함
- (사용자 중심제도) 노조에 대한 사용자측의 유리한 법 해석으로 종업원 해고가 자유롭고, 복지 등에 대한 의무도 없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 >

경제위기	정부	노조	사용자
- 1980년대 - 2차 오일쇼크 - 실업률 7.5% - 인플레이션 11.8% - (-)성장	- 레이건 노믹스 - 노조파업 강경대응 (관제사노조 불법파업) - 단체교섭, 임금, 고용 보장, 물가연동제, 사회보장제도 축소	- 관제사 노조파업실패 -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노조가 언론의 공격대상이 됨 - 노조활동 위축 ·양보교섭 수용 ·이중임금제도 ³⁾ 도입	- 노조준속 공장 축소 - 서비스업·남부로 이주 - 인적자원관리 도입 ·품질관리분임조 도입 ·노사협의회 도입 - 무노조 캠페인 ⁴⁾ 실시

자료: 김동원(1997), 「미국의 노사관계와 한국에의 시사점」, 노사포럼.

최영기 외 4인(200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와 3인(2006), 「1만~2만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미국의 사용자 중심 제도 >

구분	내용
사용자 중심제도	- 사용자의 인정 또는 선거구 선거를 통해서만 단체교섭권 취득이 가능 ·전국노사관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및 단체교섭권 영역이 결정 - 기업을 구성하는 대등한 동반자로 종업원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침해 불허 ·노조의 감독권, 자율적 결정권자들의 노조 조직을 불인정 - 인증성 등 차별 이외에 해고 가능 ·사용자가 불허하는 정치적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 가능(21개주) ·단체협약에 일시해고 규정이 있어 정리해고 가능, 분규시 대체근로자 고용이 가능 ·기업의 장애지원금 지급능력을 근거로 흡연, 승마를 하는 종업원 해고 가능
복지제도	- 자유주의적 복지로 상대적으로 취약 -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보험 등은 개인이 부담 - 기업의 훈련제도 및 훈련 시행에 대한 無의무, 정부의 강제로 인한 기업 내 훈련 無

자료: 최영기 외 4인(200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3) 동일 업무를 하더라도 근무연한에 따라 신규고용자와 기존고용자의 임금 차등을 두는 임금제도

4) 기존 노조원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비노조원들에게엔 노조가입을 가로막는 행위

○ 독일

- (노사정 협의체형) 노사정 중심의 협의와 노사간 고통분담으로 안정화됨
 - (경제위기) 독일은 90년대 후반부터 통일후유증 등으로 실업률이 6.4%~12% 대였으며, 연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얻음
 - (정부) 슈뢰더 총리가 Agenda 2010이라는 사회복지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발표하면서 해고금지제 적용완화, 고용보장 억제정책 등을 실시함
 - (노조) 사민당내 친노조 세력들이 고통분담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한 금속노조는 파업실패로 노조자체의 자성작업에 돌입함
 - (사용자) 초기 인원감축과 공장 폐쇄 등을 실시하였으나, 노조의 유연근무제 제안 등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게 됨
 - (기타요인)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린 생산방식 도입, 동독기업들의 산업·지역 단체교섭 회피로 점차 기업노조별 단체협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독일의 노사관계 안정화 사례 >

경제위기	정부	노조	사용자
- 1990년 이후 - 통일 후유증 ·통일비용 과소산정 - 경제구조 개혁지연 - 실업률 6.4%~12% - 경제성장률 1~2%대	- Agenda 2010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해고금지 적용완화 ·고용보장 억제 ·실업급여기간 단축 ·기업별 임금교섭 허용	- 사민당내 친노조 찬성 ·반대한 금속노조 파업 실패 ·노조 자체의 자성작업 돌입 - 유연 근무시간제 도입	- 인원감축과 공장폐쇄 - 린 생산방식 도입 - 동독기업 중심으로 기업노조 확산 - 공장이전 철패 등 고통분담

자료: 황선길(2003), "독일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 노동자 운동에 대한 함의," 산업노동연구, Vol 9(2).

이승협(2006), "독일단체교섭체계의 구조와 변화," 산업노동연구, Vol 12(2).

강수돌(1995), "참가형 노사관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 연구, Vol 1(1).

- (성공요인) 경제적 조합주의,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협의기구 완비, 자율적 파업규제를 들수 있음
 - (경제적 조합주의) 노조활동이 사회혁명보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혁과 임금투쟁에 한정한다는 노사관이 1910년대에 형성됨
 - (경영참여) 독일은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경영조직법이 있으며, 기업의 이사회선임권을 갖는 감사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함
 - (협의기구) 산별노조들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정책협약이 가능하며, 개별기업에서는 종업원협의회가 기업정책 결정에 참여

- (파업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산별노조만이 파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조가 스스로 파업요건을 강화하는 자율규제를 채택함

< 독일 노사정 협의체형의 성공요인 >

구분	내용
경제적 조합주의	- 사회의 혁명적 변혁을 포기하는 대신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개혁과 임금투쟁에 한정된 투쟁을 목적으로 함
경영참여제도	- 1917년 노자협의체 결성(자율 임금협약권, 1일 8시간 노동제 합의) - 1918년 전쟁참가로 정부·자본가로부터 단체협약 대상으로 인정 - 1920년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노동자평의회법 통과 - 1972년 공동결정과 직장평의회 구성에 동수 참여 등 경영조직법 개정
협의기구	- 정부주도하의 전국적 노사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산별노조와 별개로 개별 기업에 종업원 협의회를 운영함 - 60년대 경기침체 타개, 70년대 임금인상, 77년 의료보험 포괄수과제, 96년 고실업(해고금지/고용창출/임금인상) 해결 등을 위한 노사정 대합의를 이룸
파업 자율규제	- 회사나 작업장 수준의 근로자 대표인 종업원협의회는 파업권을 가지지 못함 - 노조가 스스로 파업감소를 위해 파업요건에 노조원 75% 이상 찬성으로 제한 - 불법파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시

자료: 강수돌(1995), "참가형 노사관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 연구, Vol 1(1).
 이승협(2006), "독일단체교섭체계의 구조와 변화," 산업노동연구, Vol 12(2).
 황선길(2003), "독일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 노동자 운동에 대한 함의, 산업노동연구, Vol 9(2).

4. 한국형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과제

- (기본방향) 법치주의와 고통분담과 같은 선진국의 장점을 도입, 노사 자율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형 노사관계 안정모델'이 요구됨

- 영국모델은 박정희 정부시대 노조억제 정책으로부터 형성된 지금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미국모델은 종업원들이 다국적,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집력이 약해 가능했다고 볼 때,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에서는 적용가능성이 낮음
- 독일모델은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유럽식이 아닌 미국식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이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움
- 일본모델은 연공서열제, 기업별 노동조합 등 노사관계 특징과 '춘투' 등 쟁의문화가 유사해 한국이 벤치마킹 모델이 되나, 좌우익 노동계의 이분화 및 우익계 강화와 같은 현상이 한국에도 반드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정부의 과제: 불법·정치파업 근절에 주력

- (법치주의 고수) 대국민 홍보, 무관용 원칙 고수, 손해 배상제도의 도입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법치주의를 구축해야함
 - (대국민 홍보)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의 차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손실 등 파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무관용 원칙 고수) 불법파업 시, 노사 간 협상을 통해 협의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서 일관성 있는 처벌이 필요함
 - (손실배상제도 도입) 일본의 불법파업에 대한 형·민사상 손실배상제도, 독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과 유사한 경제 손실배상 제도가 필요함
- (일관성 있는 정책)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분리보다는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이 요구됨
 -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 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노동정책이 실현되고 있지만,
 - 한국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속에 과거 정부가 추구했던 '분배' 정책이 남아있어 일관성 측면에서 제도정비가 필요함
- (노사정 위원회 정상화) 정치파업의 방지를 위해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를 정부가 주도해야함
 - 금속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현재 한국이 직면한 노사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
 - 노조탈퇴로 기능이 축소된 노사정 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사용자와 노조간의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할 것임

○ 사용자 과제: 노조를 '계약관계자'가 아닌 '협력자'로 보는 인식이 필요

- (고통분담 공유) 노조에 일방적인 고통부담보다는 사용자측에게도 고통분담의 자세가 요구됨
 - 일본 도요타는 1949년 도산위기에 몰려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창업자등 경영진이 물러나는 등, 고통분담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옴

- 독일의 지멘스 등은 공장이전 문제에서 노조의 유연시간제 제안에 공장이전 계획을 철회하는 등 고통분담의 자세로 협력관계를 유지함
 - 국내의 경우에도 동국제강, 삼양사 등도 IMF 외환위기사 인력감축을 최대로 자제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노사소통 활성화) 개별기업들은 노사협약제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와 노조간 先공유-後협의 노사협상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함
- 일본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로 노사간 신뢰를 형성하고, 기술도입, 설비 등에서 협의를 거쳐 상호 윈-윈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일본 도요타는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수준의 노사협약제를 운영하는 등 정보소통을 협력관계의 주요인으로 활용함
 - 또한 노사협상에서도 외부에 발표할 수 없는 정보들을 먼저 전달하여 불필요한 쟁의발생을 막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함
- (인적자원관리 도입) 참여·복지제도 등 장치도입으로 노사상생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복지제도, 고충처리제도 등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장치도입이 미비함으로 정부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임
 - (대기업) 경력관리와 핵심인력프로그램이 근로자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 충성도 강화에 효과적임으로 전략적인 도입이 고려됨
- 노조의 과제: 노조도 기업, 사회, 국가에 책임을 지는 당당한 주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자율규제 도입) 기업,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불법·정치파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독일의 금속노조는 노조가 스스로 파업감소를 위해 파업요건에 노조원 75% 이상 찬성을 파업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일본은 전국노조단체가 좌익운동, 집단이기주의를 배척하며, 협의문화를 형성해 파업도 단체교섭 초기에 노조의지와 단결력을 보이는 형태를 취함
 - 특히, 한국기업들의 경우, 해당 지역경제와 협력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파업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도입이 요구됨

- (성숙한 협상문화 형성) 산별노조,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정치적 이슈와 기업현안 이슈를 분리·협상하는 노동문화를 형성해야함
 - 노조가 정치적 협상 통로인 노사정 위원회를 탈퇴하여 쟁의지향적인 협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스스로 오도하는 것임
 - 조속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산별노조 등 정치적 이슈들은 협상하고, 임금 인상 등 기업현안만을 개별 노사간에 다루는 것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함

이철선 연구위원 (cslee@hri.co.kr, 02-3669-4128) 

참고 자료

강수돌(1995), "참가형 노사관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 연구, Vol. 1(1).

김동원(1997), 「미국의 노사관계와 한국에의 시사점」, 노사포럼.

박덕제(1991), "보수당 정부하의 영국 노사관계," 노동경제논집, Vol. 14(0).

비전노동센터(2007.12), "2008년 노사관계 5대 전망, 15대 쟁점" Vol. 24.

산업연구원(2007.6), '06년도 제조업 부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수출차질액 조사결과.

산업연구원(2006.8), "저성장-고실업 방지를 위한 노사관계의 안정화 긴요," 산업경제정보.

오학수(2006), "일본 노사협회의 새로운 전개방향 모색,"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윤기설(2006), 「제5의 권력」, 북코스모스.

이원우(2004), "일본의 노사관계 특질과 변천과정에 관한 소고" 전문경영인 연구, Vol. 7(2).

이상우·장영철(2007), "영국 노사관계 변화: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Vol. 7(2).

이승협(2006), "독일단체교섭체계의 구조와 변화," 산업노동연구, Vol. 12(2).

임상훈 외 6명(2005), 「한국형 노사관계모델(Ⅰ)」,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외 3인(2006), 「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전경련(2007.12),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 FKI Issue Paper.

정주연(2007), "선진국 노사관계 특성 및 최근변화: 국가간 비교분석과 국내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행.

전경련(2005.9), "노사관계 경쟁력 현황과 과제," FKI Issue Paper.

주진우(1999),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 노동사회.

최영기 외 4인(200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허찬영(2005), "영국의 노사관계와 '제3의 길,'" 한국기업경영학회, Vol 12(1).

한국노동연구원(2008), 「2007 KLI 노동통계」.

황선길(2003), "독일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 노동자 운동에 대한 함의," 산업노동연구, Vol 9(2), pp223~259.

ILO(2007),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2006*, LABORSTA.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확대

- 5월 중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개선에 힘입어 전월 대비 12억 달러 축소된 3.8억 달러에 그쳤으나,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상품수지 흑자 또한 대폭 축소됨
- 5월 중 소득수지는 전월 19.3억 달러 적자에서 약 4.6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경상이전수지 적자규모는 전월 3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개선
- 5월중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전월 대비 약 1.9억 달러 증가한 약 11.7억 달러를 기록
- 한편, 상품수지는 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9.8% 증가한 반면, 수출은 동 22.5% 증가에 그쳐 흑자규모가 4월 16.3억 달러에서 5월 6.1억 달러로 대폭 축소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4.4	5.8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9	-2.0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5.3	-2.5	-
		수출	14.4	14.1	9.4	18.2	17.5	18.6	26.4	27.2
공급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5	10.1	10.5	-	
	취업자수(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31	2,371	2,376	
	실업률	3.5	3.2	3.1	3.0	3.4	3.4	3.2	3.0	
	수입	18.4	15.3	7.3	25.9	28.2	25.9	28.5	28.8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54	60	44	32	-52	-1	-1.6	-3.8	
	무역수지(억\$)	161	146	45	27	-59	-9	-2	10	
물가	생산자물가	2.3	2.7	2.0	4.3	6.9	8.0	9.7	11.6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3.9	4.1	4.9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지속

- 금리: 4월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Citigroup의 추가자산 상각 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대되면서 전주말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4.16→ 4.03%)
- 환율: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2/4분기중 Citigroup의 추가자산상각(89억달러)를 전망하는 등 신용위기 대한 우려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시현 (\$/€ : 1.5606→1.5757, ¥/\$: 107.33→106.82)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급락 및 환율 급등

- 주가: 미국 증시 급락과 국제유가 반등 등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731.0→ 1,684.5)
- 금리: 주초반 한은의 통화 긴축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 등으로 5.87%까지 상승 하였으나, 단기급등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미 연방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72→ 5.77%)
- 환율: 무역수지 적자폭 증가로 인한 달러화 매수심리 강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 수요 및 외국인 주식 매도 송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028.0→ 1,041.5)

○ (전망)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전망 불투명으로 주가의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6.20	6.27 ¹⁾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731.0	1,684.5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5.72	5.77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028.0	1,041.5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1,842	11,453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3,942	13,822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41	4.16	4.03
	일본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29	1.77	1.66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606	1.5757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7.33	106.82
	두바이(\$/배럴)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27.09	128.41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6.26) 기준